

민주·한국, '청년층' 구애 경쟁 치열

민주, 20대 지지율 하락세 만회 위해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한국, '취약층' 청년 표심 잡기 위해 대학 청년지부·청년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20대 지지율 하락세를 만회할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당은 취약층으로 꼽히는 20대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민주당은 당내에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등 청년 민심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당 지도부는 지난 19일 청년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청년 의제 및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의 청년정책관실과 협의·소통해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해찬 대표도 출범식에 참석해 "분단을 극복하고 삶의 품위를 유지

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삶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청년들이 그 주역"이라며 "젊은 세대가 이념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잘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지난 17일 서울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 주택을 방문해 "주거뿐 아니라 취업과 교육 측면에서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청년 기본법과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유스 개헌안을 추진하겠다"며 청년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천 룰에서 청년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 범위를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 조정하는 등 청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총선 준비를 시작하면서 보수정당에 취약층으로 꼽히는 청년층의 표심 공략에 나섰

다. 황 대표가 직접 나서서 청년 관련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향교안X2040 청년창업가 토크(talk)! 토크(talk)! 토크(talk)!'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가들에게 조언을 해 주는 시간을 가졌고, 각종 대학교를 방문하며 학생들의 취업 고민 등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중도로의 의견 확산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매달 두 번씩의 청년 행사를 갖자고 청년 위원장에게 당부해 왔다"며 "청년 정치캠퍼스 Q'를 모집하고 대학에 자유한국당 청년지부를 만드는 등 인재를 키우는 일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청년 부대변인도 공모해 최종적으로 30명을 추린 상태이며 심층면접을 통해 10여명을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중도 병

보로 대안정당으로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각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비교적 지지정당이 뚜렷하지 않은 20대가 총선에서 캐스팅보트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권의 구애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40대 이상은 대부분 정치성향이 뚜렷한 것에 비해 20~30대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여야 모두 20대와 30대 초반까지의 표심을 잡는 것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또 젊은층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연령층으로 지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젊은 층이 좋아하는 정당은 기본적으로 미래가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대안정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젊은 역동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고 여야가 애를 쓰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박 교수는 두 정당의 청년 구애 작전이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정당 스스로가 20~30대에 맞는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정책만 가지고 청년층 표심을 사려는 노력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민주당의 경우 청년일자로나 임대주택 등 청년들이 마음껏 꿈 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 우과 이어가던 하연 청년층이 좋아하겠나"고 꼬집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文, 미·중·러와 '연쇄회담' 비핵화 대화 발판 마련 촉각

문재인 대통령은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가진다.

문 대통령은 내주 펼쳐질 비핵화 외교전을 대비해 주말 동안 관저에서 머물면서 구상을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 주가 긴박하게 돌아갈 것"이라며 "출국 전까지 양자 회담을 하는 나라들에 대해 공부하고 비핵화 의제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오사카를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G20 정상회의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미정 상태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담의 의미는 문 대통령에게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전락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존 북미가 해결할 문제를 다자가 함께 해결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겠지만 비핵화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중과약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 뒤 대담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인제는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G20 이후 예정

된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침묵했다.

북한은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서 외교를 통해 메시지를 발신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의 문을 열어 잡았던 북한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부터였다. 김 위원장은 2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나아가 G20 정상회의 개최 직전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외교까지 선보였다. 중국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뜻을 밝히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내내심을 유지하려 한다"며 미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예뻐 요청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인 4월 말엔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남북미중의 정상외교 일정이 한반도 주변국들 간의 연쇄 접촉을 촉발하면서 '하노이 노딜' 이후 중단됐던 북한 비핵화 논의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트랙들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대화를 촉진하는 여러 노력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방북 일정을 마친 21일 고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과 조만간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및 협상이 조기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시스

나경원 "국회 정상화 안 돼도 인사청문회·국정조사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또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도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동시에 운영

위원회, 국방위원회서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며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따져보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서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패스트 트랙 날치기 처리에 대해 사과도 안 하고 철회는커녕 합의 처리 약속도

안하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제1야당의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더해 "추경의 경우도 이미 밝혀진 것처럼 예비비 3조원 등 정

"여당 사과 없이 제1야당 백기투항 강요"
"정상화 의지 읽을 수 없어...공존 정치해야"

부가 의지만 있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존재하지만, 마치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막아 경제가 더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

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 정상화 의지를 그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다. 실제 지난 일주일간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의 어떠한 협상 시도도 없었다"며 "인론에는 마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은 내일 24일 일방적으로 분회의를 열겠다고 말한다. 이는 지난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며 "집권세력은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 공존의 정치 화북민이 국회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고 민생 해결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가짜뉴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